



승실대학교 유형 변형 1회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에 대해 논술하시오.

(700±70자, 40점)

[문제 2] 제시문 [라], [마], [바]를 토대로 <보기 2>에 나타난 국가 A의 상황이 '분배 정의'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80자, 60점)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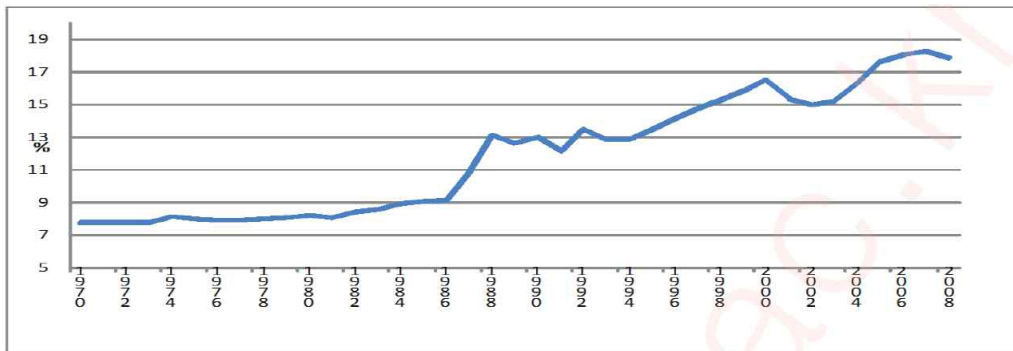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는 사회의 저변에서 발생한 몇몇 의미심장한 중대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다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적 학생 폭력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 병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혹행위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지는 살상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이 문제는 국가의 교육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가 사정 기구가 나서 전면전을 선포하여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형태를 띠고 발생하지 않는 한 사법기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래적 의미의 인성 교육 또는 도덕교육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문제도 전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아예 문제로서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픔을 느껴야 한다. 아픔이 없고서는 아무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그것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과거 공권력이 남용되던 시절 거대 폭력에 맞설 때 느껴지던 비장감이, 더 골치 아프고 숨어서 행해지는, 따라서 어쩌면 더 악질적인 형태의 폭력 행위를 개탄하는 자리에서는 전혀 감돌지 않는다. 어쩌서 그럴까? 아마도 이것이 ㉠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고민스러운 성격** 을 잘 말해주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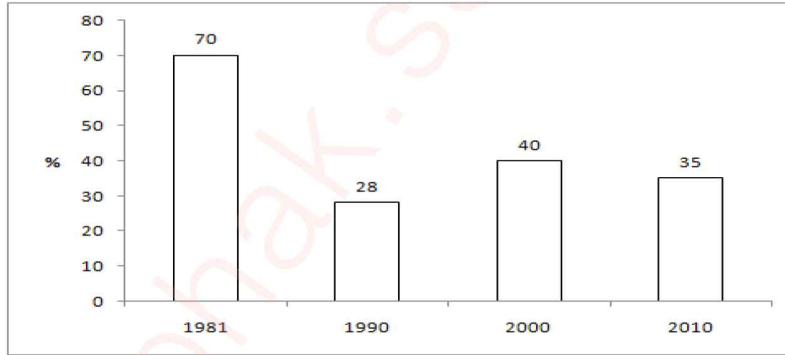
<보기 2>

[그림 1] 국가 A의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변화*



*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 $\frac{\text{상위 1\%인구의 소득 총합}}{\text{전체 인구의 소득 총합}} \times 100$

[그림 2] 국가 A의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변화*



* 누진적 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구간을 나누어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제시문 [가]

국가가 사회 및 문화와 맺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모든 것, 즉 유럽의 근대성과 세계의 근대성 그리고 그것의 산물인 원인이기도 한 자본주의가 모두 국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을 겪은 나라들, 예컨대 20세기 전반의 독일과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실망하고 후에는 민족사회주의를 주창하여 나치즘에 근접한 베르너 쾰른, 적과 동지의 구별을 ‘정치적인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카를 슈미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말해 사회·문화 현상, 그 모든 것이 국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른 입장은 반대로 국가는 불완전하고, 가능한 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도, 모든 책무를 다 할 수도 없으므로 괴롭더라도 다른 것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마 이 입장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선의 이름으로 개인들을 억압할 권리를 갖지만, 어느 국가도 지배계급과의 공모 없이는 지탱하지 못한다고 본다. 즉 국가는 사회와 문화에 비해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구조와 방식, 즉 모든 구조에 스며들어있고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힘은 국가를 훨씬 넘어서 있다. 그 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계들을 함쳐 놓은 것이고, 모든 강제수단들의 축적이며, 그곳에서 국가는 늘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국가는 흔히 전체의 핵심 부분이지만 국가가 유일한 지배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는 지위로서 사라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의 책임을 모두 국가에게 지우기보다는 국가와 사회, 특히 사회의 지배계급과 주권자 개개인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본다.

제시문 [나]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는 원래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체결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군림했던 아테네를 가리키는 ‘헤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현대에 들어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레닌에 의해 노동자-농민 동맹에서 노동자계급이 행사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로 재해석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러한 레닌의 헤게모니 개념을 확대하여, 이를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리더십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때의 리더십은 오로지 강제만이 아니라 동의를 통해 관철된다고 역설하면서, ‘강제+동의’로서의 헤게모니는 피지배층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지배층의 리더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배층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설득을 통해 피지배층을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진정한 혁명은 국가 기구를 폭력적으로 타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가 기구를 옹호하고 있는 다양한 동의의 기구, 그러니까 학교, 군대, 교회 등 시민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해체해 나아가는 끈질긴 지구전, 즉 기동전과 대비되는 진지전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헤게모니론은 경제적 토대가 정치적·문화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환원론을 수정해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둘째, 헤게모니론은 시민사회에 비해 국가가 비대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경우보다는 시민사회의 동의 기구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서구의 경우에 잘 들어맞는 새로운 혁명 전략이다. 셋째, 헤게모니론은 이탈리아 근현대사에서 확인되는 세력 관계에 대한 그람시 특유의 사적 비판의 소산이다. 즉 헤게모니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이탈리아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근현대사가 왜곡되고 굴절되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다. 급속한 근대화를 거친 우리 사회도 지배층의 바람직한 헤게모니가 부재했고, 이는 국가 기구를 엄호해야 할 다양한 동의기구가 동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한국사회의 경우 36년간의 식민통치, 남북 분단, 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생산하고 지켜나갈 기성의 주도계층은 붕괴 또는 해체되었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주도적 세력이나 집단은 형성될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정치와 독립적으로 사회 영역 내의 주도적·독자적 규범을 생산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대신 정치권에서 반복해온 가시적인 폭행 관행을 사회도 따라갔다. 이러한 상황, 즉 정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거의 부재하거나 있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금전 같은 적나라한 힘이 다른 무엇에 우선하는 가치의 척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를 끌어왔던 정치 과정으로부터 독립된 사회규범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특히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유교규범은 나름대로 특정 시기와 장소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기도 한다. 예컨대 효를 강조하는 부자관계나 충을 강조하는 군신관계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되지만 그러한 규범이 단순히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또는 양(兩)방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현대에도 여전히 타당한 규범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나 규범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그것을 주도적 규범으로서 사회의 각 집단이나 개인들을 실효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회세력의 존재이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이나 가치를 정치세계에 반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회세력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세력은 정치권력에 의존 또는 봉사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다. 그리고 그 국가권력의 수립은 항상 정당성 문제를 야기했고 또한 수립된 정권은 사회적 부정·부패와 연루됨으로써 주도적 사회계급을 대신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의 획득에 실패하였다.

제시문 [라]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부는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한다. 공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는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대한 논의는 효용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회의 효용총량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사회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분배정책의 방향을 수립한다. 첫째, 사회의 효용은 개인들의 효용의 합이고, 둘째, 모든 개인의 효용은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한 양상으로 증가하며, 셋째, 소득증가에 따른 효용증가의 크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한계 효용체감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실사회에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로 이전시키는 재분배 정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의 총소득



으로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사는 한 사회에서 갑의 소득은 5백만원이고 을의 소득은 3백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이 사회의 총소득은 8백만원이다. 정부는 사회의 총소득을 가지고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갑의 소득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거두어 을에게 주려고 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이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줄어듦에 감소하는 효용보다, 을의 소득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의 총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에서는 평등주의적 소득분배에 제한을 가하는 추가적 논의를 진행한다.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재분배로 인해 사회의 총소득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 파이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정부가 자신의 소득 1백만원을 거두어가는 경험을 한 갑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어 다음달에는 4백만원을 벌고 을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면, 사회의 총소득은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총효용도 감소하는 것이다.

제시문 [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상과 부담이 배분되는 방식은, 그것이 만일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에 정해진 의도에 따른 할당의 결과였다면, 많은 경우 아주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배의 몫은 어떤 과정의 결과이다. 그 과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시장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시장 메커니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해 주었기에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이해했던 것처럼, 모든 중요한 측면들에서 이것은 하나의 게임, 즉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과 전적으로 유사한 과정이다. 그것은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로, 목표, 기술, 지식이 각기 다른 개별 참가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 또한 보통은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처럼 공정해야 하고 또 누구도 속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기자들에게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 결과들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의 서비스를 그의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활동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제시문 [바]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리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모르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분배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선택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잇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



출제 의도 및 예시 답안

출제 의도

- 최근 3개년간 송실대의 논술 기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2023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활용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과 같은 상태가 혐오의 발생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토대로 <보기 2>와 같은 혐오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를 논술하시오.
- (2022 기출) 1. 제시문 (가), (나), (라), (라)를 두 입장으로 나누어 대조하고, 한 입장을 택하여 <보기 1>의 밑줄 친 ㉠의 물음에 답변하시오.
 2. <보기 2>는 현대 예술의 방법과 지향점을 논한 글이다. 밑줄 친 ㉡의 의미를 <보기 3>의 밑줄 친 ㉢의 관점과 관련지어 논술하되, [문제 1]에서 선택한 한 입장과 제시문 (마), (바), (사)를 근거로 활용하시오.
- (2022 모의)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도덕적 판단의 원천과 관련하여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시오.
 2. 제시문 (사)의 아이히만의 자기변호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다음의 두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 (2021 기출) 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보기 1>의 ㉠과 같은 반응이 현대 사회에서 <보기 2>의 ㉡과 같은 집단 광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 (마), (바), (사)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 (2021 모의) 1. 제시문 (나), (다), (라), (마)의 입장을 두 부류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논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와 제시문 (바), (사)에 근거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제시문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큰 틀에서 송실대는 <보기> 또는 밑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적용 분석형 논제를 출제하고 있다. 간혹 경희대 인문과 유사한 분류형 논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 적용 분석 논제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시문들의 단순 요약 및 나열식의 적용은 송실대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답안 유형에 해당된다. 송실대는 여러 차례 입학처의 출제 의도에서 밝히듯, 제시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 및 조합을 통한 입체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타 대학 논술문제들에 비해 비교적 송실대의 제시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수험생들 입장에서 간신히 제시문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치 요리 재료를 요리하기 편하게 다듬듯, 각 제시문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요약보다는 개괄적인 요약을 간략한 1-2문장으로 기술한 뒤, 그것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항들은 2023 모의 유형과 유사한 형태의 밑줄에 대한 분석과 해석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해설 및 예시 답안

[문제 1]

<보기 1>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라고 먼저 묻는다. 그런 다음, 그 답은 개인이나,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있지 않다고 전제한다. 즉 학교폭력의 문제는 문제의 성격상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제기는 그 다음에 나온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전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현대 우리 사회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밑줄 ㉠이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 사회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폭력문제의 원인이나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차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우리사회 전체를 분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즉, 우리사회가 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며, 다른 사회들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그런 차이가 생겼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국가가 사회 및 문화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진다고 말한다. 첫 번째 입장은 모든 것이 국가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국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따라서 국가는 다른 세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후자라고 주장한다.

-> 이때 (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 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의 독일과 일본처럼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도 많았음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시문이 지적하듯, 국가가 불완전하다고 보는 두 번째 입장이 더 타당하다면, 따라서 국가는 유일한 지배자도 아니고 지위저서 사라질 수도 있다면, 모든 책임을 국가에 모두 지우기보다는 국가와 사회, 특히 사회의 지배계급이 국가와 함께 지고 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헤게모니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고 또 그것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 이때 (나)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짚어내야 한다. 하나는 헤게모니의 내용이 '강제+동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지배층이 헤게모니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한 이탈리아 지배층의 무능이 이탈리아 근현대사의 왜곡을 낳았다면, 보기 1에서 문제 삼은 우리 사회, 즉 중대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잘못된 우리 사회도 지배층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급속한 근대화 내지 서구화를 겪은 우리사회는 국가가 비대한 소련이나 동구보다 헤게모니론이 적용되기에 더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학교와 군대에서 조직폭력이 심하다면, 이는 국가 기구를 엄호해야 할 동의기구가 동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배층의 헤게모니 부재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는 일제 식민지 시대 이래로 한국 사회가 겪은 독특한 역사적 과정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즉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는 20세기 이전까지 사회를 주도해온 기성의 주도계층은 해체하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세력은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사회 내에서 독자적인 규범을 생산하는 일이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사회는 정치권에서 반복되어온 가시적인 폭력관행을 좇아갔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권력이 정당하게 수립되고 그 국가권력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뿐만 아니라 헤게모니를 지닌 사회의 지배계층이 모든 일을 국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사회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1>

학교 폭력 현상과 관련해서 <보기 1>의 ㉠에는 국가의 불완전성, 지배층의 헤게모니 부족, 사회세력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민스러운 성격이 나타나 있다.

우선 (가)에 따르면 국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것들에 의존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가진 폭력이라는 문제도 국가와 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입장은 국가와 지배계급, 권력의 작동 구조 사이의 힘을 더불어 강조한다. 즉 국가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구조의 지배계급과 개인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처럼 집단 폭력 사태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지지 못한 점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나)에 근거한다면, 지배층의 리더십에 헤게모니가 부족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헤게모니란 동의에 기반한 강제력이며, 정치적 리더십 뿐만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을 함께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가기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리더십도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의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 즉 헤게모니가 요구되는데, 폭력이라는 문제를 단지 학교나 군대와 같은 발생 기관으로 한정지어 해결하려는 <보기 1>의 상황은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에 근거했을 때, <보기 1>의 문제해결은 국가와 개인의 중간 단계를 맡아줄 사회세력이 부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세력은 고유한 가치관을 갖고 이를 규범화해 집단과 개인을 이끄는 존재이다. 폭력은 이러한 사회세력과 사회 규범의 부재 속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을 정립하고 실현할 사회세력의 부재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역을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사회는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사례 2>

<보기 1>의 ㉠이 본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학교 폭력이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만 그치지 않고 군 병사들 사이의 가혹행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이미 국가가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공감을 요구하는 문제라 본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고민스러운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모든 능력을 절대적으로 가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가)의 입장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 (가)는 국가를 둘러싼 힘은 언제나 국가를 넘어서 있고, 그러기에 국가는 유일한 지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 폭력이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보기 1>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나)의 헤게모니론을 통해 (다)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다)에 의하면 한



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주도적 세력이나 집단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반복되던 폭행은 주로 개선될 수 없었고 새로운 시대의 지배계층을 맞이할 기회도 적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은 지배층의 물리적 폭력이 아닌 기존의 제도들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이미 확산되었고 이러한 관행처럼 굳어진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다른 아픔에 공감할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유교규범과 이를 이끌어갈 사회세력을 강조할 수 있다.

<사례 3>

국가와 사회가 갖는 관계에 관한 (가)는 국가가 사회 문화에 비해 불완전하다고 말한다. 국가의 권력이란 결국 그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 문화적 구조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나)는 헤게모니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지배층, 권력층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논한다. 강제성을 띠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갖춘 리더십을 사용하여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는 한국사회의 정치권이 도덕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구시대적 사회적 규범을 따라간다고 주장한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의 모습이 변화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성이 가치의 척도가 되어 사회, 문화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흡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 지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뒷받침한다. <보기 1>은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란 사회, 문화에 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굳어진 집단 폭력의 실태를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의 문제를 본다면, 권력층의 도덕성 부재라는 것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민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능력이 부족한 한국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정치권이 보여왔던 폭력 행태를 사회, 문화가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폭력적인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할 때, <보기 1>의 ㉠이 말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가 갖는 성격은 정치권의 도덕성 부족과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 구조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제 2]

<보기 2>의 <그림 1>과 <그림 2>의 현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림을 통해 국가 A에서는 1970년대 이래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약 8%에서 18%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70%에서 35%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는 국가 A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정부의 재분배적 개입은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기 2>를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제시문 (라), (마), (바)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때 각 입장의 논리를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2>의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라)와 (바)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은 상이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제시문 (라)의 입장에서의 해석할 때, 단순한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단순주장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라)의 공리주의와 이에 기반한 공공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즉, 사회의 효용총량)의 증진을 주장한다. 그래서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나머지 계층들의 소득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전체의 효용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와 관련하여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통한 재분배의 필요성과 전체 성장(파이)의 중요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의 영향은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효용증가와 상위 1% 계층의 경제활동 저하(예를 들어 근로 및 투자 유인 저하)로 인한 전체 파이감소에 따른 효용감소의 크기에 대하여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전자(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가 후자(상위1%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파이 감소와 그로 인한 효용 감소분)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를 통한 재분배 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개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저소득층의 효용증가보다 전체 파이 감소에 따른 효용감소가 더 크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와 공공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대해 허용적인 한편, 정부의 재분배적 개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입장에서의 해석 역시 단순히 시장에서의 분배가 바람직하고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식의 단순 주장보다, 시장의 분배가 바람직한 이유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이예크의 입장에서는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더라도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위 1%에 더 많은 소득을 할당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스포츠 게임처럼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장메커니즘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임으로, 이에 대해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재분배하려는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 조치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인위적인 힘에 의해 자원을 할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 입장에서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롤스는 평등한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단순 주장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평등분배를 선호하지만, 최하층(최소수혜자)에 이익이 될 경우에만 차등적 분배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라는 논리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즉 롤스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가급적 평등한 분배를 선호하고 또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의 최하층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선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최하위층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가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최하위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소득세율의 증가를 통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최하위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면, 현재의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를 통한 개입은 불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분배정의와 관련된 시사점은 (라)가 보여주는 사회의 생산성과 효율, (마)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바)가 강조하는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다양하기에, 각자의 제시문의 관점에서 분배정의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례 1>

<보기 2>의 그림 1에서 국가 A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약 18%에 이른다.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2000년에 상승하지만, 2010년에는 1981년의 소득세율의 절반인 35%까지 하락한다.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된 분배 정의적 관점이 시사하는 바를 제시문 (라), (마), (바)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라)에 의하면 공공경제학은 사회의 효용이 개인들의 효용의 합이고, 모든 사람의 효용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동일하게 증가하고, 소득증가로 인한 효용증가의 크기는 한계효용체감 양상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공공경제학은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을 이전시켜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라)의 관점에서 분배 정의는 한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고소득자의 의욕을 저해하여 사회의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마)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분배는 어떠한 과정의 결과라고 본다. 이 과정은 개입과 유사하기에 공정하고 정당당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력과 운에 의해 좌우되기에 결과마저 반드시 평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마)가 생각하는 분배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의 롤스에 의하면 용인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은 두 가지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러한 (바)의 관점에서 <보기 2>의 국가 A의 상황은 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수혜자인 저소득층이 아니라,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세율이 낮은 것은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즉 국가 A는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소득세율은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고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켜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소득세율은 고소득층의 의욕을 증진하여 사회의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라)와 (바)가 지향하는 분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사고의 한계로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마)가 생각하는 분배 정의적 관점에서, 국가 A의 상황은 정당하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분배를 결정된 과정의 공정성이 충족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문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례 2>

(라)는 공리주의의 분배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경제학의 분배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공공경제학에서는 사회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분배라는 공리주의의 생각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효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때 소득에 따른 효용 증가율은 한계가 있으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일정 부분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것이 분배정의적 관점에서 마땅하다고 본다.

분배 정의에 대한 입장은 (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마)는 시장 메커니즘의 배분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분배가 결정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불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함이라는 분배의 조건은 균등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본다.



한편 (바)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 분배 정의를 논하고 있다. 즉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지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모두가 평등한 권리하에서 가장 불리한 자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방식의 분배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배에 대한 입장들을 고려하며 <보기 2>의 그림들을 보았을 때, 국가 A는 고소득층이 소득을 점유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득세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판적 상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라)의 입장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효용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소득세율은 낮아지는 것은 사회의 효용을 감소시키므로 분배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마)의 관점에서 국가 A의 상황은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해석된다.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정해진 결과가 없고 결과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최상위층의 소득점유 정도가 높아지고 소득세율이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바)의 관점에서 국가 A의 상황은 분배 정의적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상위 계층이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어디까지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을 보장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